

서울특별시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61
----------	------

2021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8. 김춘례 의원 외 46명
- 나. 회부일자 : 2021. 11. 16.
- 다. 상정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 2021년 12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가장 적게 재정지출을 풀었고, 그마저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에 치중했음.
  - 코로나19로부터의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서울시민에게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함.

##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로부터의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 이 송 처 : 서울특별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전례 없는 세계적·국가적 재난으로 평가받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개인 차원의 효과적인 방역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모든 서울 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자고 제안되었음.

###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 코로나19 감염병은 '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1년 12월 15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536,495명, 누적 사망자 4,456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음.
-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방역 안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국민안심병원 설치 등의 선진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시행 이후 다시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마져 발생해 감염병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
- 코로나19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뿐 아니라 전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미쳤으며, 이는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해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21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였고, 서울특별시도 '21년 본예산과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약 3조 5,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해왔음.
  
- 그러나 이런 정책실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예산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에서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소속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
  - 같은 자료에서 한국과 20개 선진국 평균 간 격차는 '20년 10월 4.7% 포인트에서 '21년 10월 9.2% 포인트로 더욱 증가하였음.

---

1)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한겨레 2021-11-09). 그 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최소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소개는 “해외 선진국은 자영업자에게 '억대' 코로나 보상을 했다”(경향, 2021-09-29) 참조.

<그림-1>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단위 : GDP 대비 지출 비중, %)



-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의 국제 비교가 한국과 여타 선진국 간 감염병 확산 실태와 방역 실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추가 재정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고 재정 여력도 충분한 만큼,<sup>2)</sup>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지원 예산의 집행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나타나고 있음.<sup>3)</sup>
  - 한편에서는 선별 지원이 대상 선정과 지원금 산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전국민 지원은 소비창출을 통한 경기진작과 그에 따른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총부채 비율과 순부채 비율은 주요 20개국 소속 선진 1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MF Fiscal Monitor, 2021).

3) “경제하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생각보다 커’(서울신문 2021-02-05), “재난지원금 효과 어땠길래?...‘전국민’ 지원 논쟁 다시 수면 위로”(한겨레 2021-02-07).

-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민 지급의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에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정부가 집행한 4차례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단 1차례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만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크고,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와 방역지원·피해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만큼 서울특별시가 선도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의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및 여타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예산 규모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방역지원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개인 차원의 효과적인 방역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모든 서울 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의 심각성과 기존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의 미흡한 규모 및 최근 다시 급증하는 감염병 확산세에 비춰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됨.
- 다만, 전 시민 방역지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재정 건전성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여타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 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

(김춘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6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1월 08일

발 의 자 : 김춘례, 강동길, 경만선,  
권순선, 권영희, 김경우,  
김생환,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문영민, 박순규,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한아, 우형찬,  
유 용,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종환,  
이현찬,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47명)

## 1. 주문

- 코로나19로부터의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가장 적게 재정지출을 풀었고, 그마저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에 치중했음.
- 코로나19로부터의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서울시민에게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함.

### 3. 이송처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따른 자영업 위기와 고용 충격 등 경제의 전 분야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은 최소 한 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이보다는 더 많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생계 위기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1차 지원금을 제외하면 취약계층이나 피해업종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전히 우세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투입된 재원 대비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했으며, 이는 대만이나 미국 방식에 의한 소비 증대효과보다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미국(16.7%), 영국(16.3%), 일본(15.6%), 독일(11.03%), 프랑스(7.7%)는 물론 중국(4.7%)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가장 적게 재정 지출을 풀었는데, 그마저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에 치중했다.

우리나라의 방역이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적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IMF 기준으로 방역과 관련 있는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출 비중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피해업종 손실보상 외에도 경기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도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실질적 생계를 위해 쓰였고 이것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규모 자영업에 집중 사용된 것으로 생계위기 극복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정책적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제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서울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을 넘어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2021.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